VISION 1

중산층
경제 벨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넓히겠습니다.

국민경제의 허리, 중산층 행복지수 상승

1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실업의 고통, 없애겠습니다'

- 규제완화 · 세율인하 · 노사안정
-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시스템 도입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 금융규제 완화
- 법인세율 인하
-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 연결납세제도
-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부담 완화
-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 의료 · 교육 · 복지 · 금융 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 해외인턴 3만 명, 해외취업 5만 명 달성
- 청년창업 장기자금 지원제도 도입
- 4대 보험료 등 부담금 조정(소규모 기업)

2 취업능력, 향상시켜드립니다.

'우수한 일꾼, 재취업 보장'

-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지원
- 60세 이상 고용보장 지원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실현
- 노인 · 여성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맞춤형 여성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 고령자의 고용지원 확대
-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3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집니다'

- 서민 6대 생활비 절감
- 서민물가 안정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 시행
-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 자녀세액공제제도 신설
- 근로자 자녀 학자금부담 경감
-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4 내집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집 걱정 덜어드립니다'

-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 확대
- 서민주택금융지원 확대로 이자부담 축소
- 매년 수도권 30만 호, 전국 50만 호 주택공급
-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보육 · 사회안전 · 교육 · 노인복지 시설 등 정부시범사업 최우선 배정)
-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
- 택지공급 확대와 주택분양가 10% 추가 인하

VISION 1

중산층 경제 벨트

목표 1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실업의 고통, 없애겠습니다'

규제완화 · 세율인하 · 노사안정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지난 몇 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성장률, 기업투자 감소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고, 일자리 부족으로 생활고통지수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감세 및 규제 완화, 정부 인프라 혁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기업성장–고용확대–가처분소득 향상–소비증대–기업이익 상승–투자확대'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벨트가 형성돼야 합니다.

■ **규제를 최소화, 기업성장과 고용증대를 막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겠습니다.** 선진국형 기업경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영능력을 확충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 **공장설립 간소화, 공장설립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센터(FOSS : Factory One-Stop Service)'를 설치 · 운영하겠습니다.** 센터 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요 유관기관 담당공무원들을 파견근무하게 하여 기관간 협의시간을 최소화하고 민원건별로 담당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책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담 최소화,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세부담이 선진국 이하의 수준이 되도록 하여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한 조세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나가겠으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노사관계를 법치화, 불법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해서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 · 장기 노사분규로 인하여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불법 노사분규로 인하여 기업운영 손실은 물론 기업 자체가 문 닫는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34 western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노사안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고용친화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게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불안으로 M&A나, 부도, 사업장 축소·폐쇄 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시스템 도입 / 법령·시스템·행정절차의 재정비

투자활성화 → 일자리 창출·내수회복 →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의 모토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정부의 친기업 투자환경 추구에 맞게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규제개혁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규제개혁 법령도 정비하여 포괄규제의 일괄처리 근거를 마련할 「규제개혁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규제법률주의 실현 및 규제심사 강화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규제절차의 매뉴얼을 도입하겠습니다.

■ **의원입법 규제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의 연계를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36 western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 투자활성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국내기업들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출 및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등으로 기업이 경영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M&A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논란이 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폐지하겠습니다.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에 관한 규제는 금융기관이 대출심사과정에서 개별 지주회사의 사업실적·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도 투자·제휴 등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겠습니다.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부문 기여도 제고

산업자본(비금융부문 자산규모 2조 원 또는 자본비중 25% 이상)에 대해 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4%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전적·획일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 산업자본이 의결권 없는 사원(LP)으로 참여(4% 초과보유 최다출자 또는 10% 초과보유)한 사모투자펀드(PEF)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연기금·펀드형태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한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은행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38 western

금융규제 완화 /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현실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제로 얽혀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규제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들의 업무장벽과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과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투명경영 · 윤리경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한 후 은행권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독방식도 사전적 · 획일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후 개별적 심사 · 감독 방식(Fit & Proper Test)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현행 비은행 지주회사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율인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세율인하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율을 선진 경쟁국 수준이하로 인하하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 비과세 · 감면대상의 효율적인 축소와 정비로 안정적인 세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높은 세율은 25%→ 22%→ 20%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은 13%→ 10%로 인하하겠습니다. 법인세 과표 구간도 조정하여 1억 원 이하 13%에서 2억 원 이하 10%로 낮추겠습니다.

■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40 western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 기술개발 지원

R&D투자 규모 및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민간 R&D투자는 216억 달러('06년)로 미국의 1/10이며 일본의 1/5 수준입니다.

■ 투자 단계에서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출 단계에서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의 R&D투자 확대로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납세제도 / 기업 세부담 합리화 및 구조조정 지원

기업들의 각종 세금부담은 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업종이나 동일분야별로 기업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룹형 기업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중과세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OECD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경제적·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부담 완화 / 기업경쟁력 제고

현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높은 보유세부담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기업의 고비용구조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들의 보유세부담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 소비촉진 및 관광산업 육성

과거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와 외부불경제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등에 따라 사치성 재화소비의 억제기능이 사실상 소멸되고 교통혼잡·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억제를 위한 교정세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귀금속, 고급사진기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국내 관광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 취득세 중과제도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44 western

의료·교육·복지·금융 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기업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성장동력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고용 폭을 넓히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지체되어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혜택을 늘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지원·의료복지, 여가관련 서비스산업, 비즈니스지원 서비스산업 등 각종 서비스지원산업의 영역이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조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보다는 각종 서비스분야에서 인력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비전문적이고 임시직·비정규직 인력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성과 인재를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가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이후부터 각종 레저·휴양 관련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에 따라 선진국형 서비스문화산업 정착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자리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설립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점 설립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설립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 명 양성계획을 마련하여 금융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중 금융회사나 기업에서 인턴십과정을 거칠 경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부품 소재산업 등을 육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3D업종 기피현상에다 낙후된 시설,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력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부품 소재기업들이 현대화되고 고부가가치형의 생산근로환경과 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46 western

해외인턴 3만 명, 해외취업 5만 명 달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

글로벌 청년리더의 양성은 미래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되도록 국내·외 글로벌기업 및 대학 등을 통해 해외취업 확대와 해외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져 국제적 역량을 배양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문대생의 해외인턴사업을 확대하고, 4년제 대학생의 해외인턴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해외인턴 3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해외인턴 민간업체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인턴십 비용을 매칭펀드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자체 인턴지원사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건전한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해외인턴사업 대상 지정기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직업진로지도, 인턴·직장 체험, 산학협력 지원,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청년 채용확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

■ 각종 국제기구·재외공관·비영리단체·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는 물론 해외지사·민간 알선업체·대학 등과 연계하여 인턴·연수업체를 발굴하고, 주요 국가들과 장기적·안정적 해외수요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 해외취업 5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리더양성본부(글로벌 HRD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취업지원센터를 '글로벌리더양성본부'로 개편하여 해외취업지원을 총괄하겠습니다.

■ 해외인턴 참가자, 해외취업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민간단체를 육성하여 언어능력을 배양하고 분야별 전문지식과 국제매너 등을 갖춘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IT·자동차설계·간호사·비즈니스전문가 등 각 분야별 맞춤식 연수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 기업-대학-정부 간 글로벌인재양성협약을 추진하고, 경제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을 통해 청년층의 해외일자리 확보 및 사후관리를 하며, 정부는 재정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청년해외봉사단 2만 명 달성을 이루겠습니다. 청년해외봉사단(KOICA) 파견규모를 확대, 청년들에게 국제적인 봉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간의 협력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파견 내용과 형태를 다양하게 추진하며, 청년들이 해외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48 we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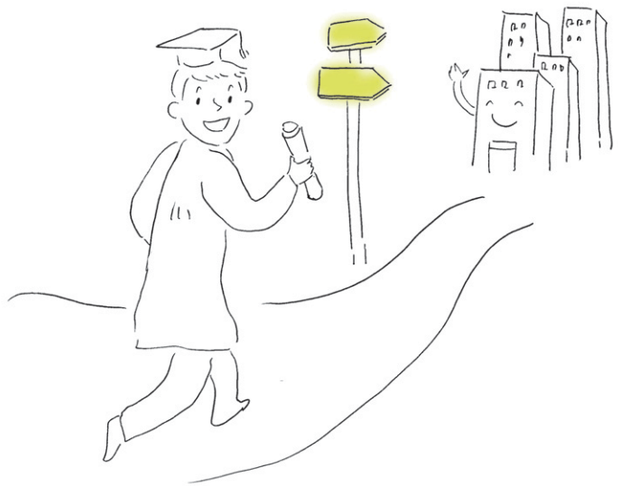
청년창업 장기자금 지원제도 도입 / 청년 일자리 창출 증대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창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창업준비 단계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창업컨설팅·창업금융 및 보증 등이 산재해 있어, 실제 안정적인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고 사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창업자금 지원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요건을 완화·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장기(10년 정도)의 창업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대의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한도는 5천만 원~1억 원 정도로 거치기간과 원금상환기간을 창업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금리조건도 최우대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유동화를 통한 ABS채권발행, 은행대리대출방식과 SPC의 직접대출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SPC를 통한 직접대출방식은 저금리 및 신용불량정보 등록요건 완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창업준비 단계의 행정절차 대행서비스,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및 보증, 창업 후 애프터 서비스 등 모든 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창업플라자 등 기존의 창업 지원조직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등 업무를 정부위탁사무로 지정해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 1만 개의 청년창업을 지원할 경우 청년실업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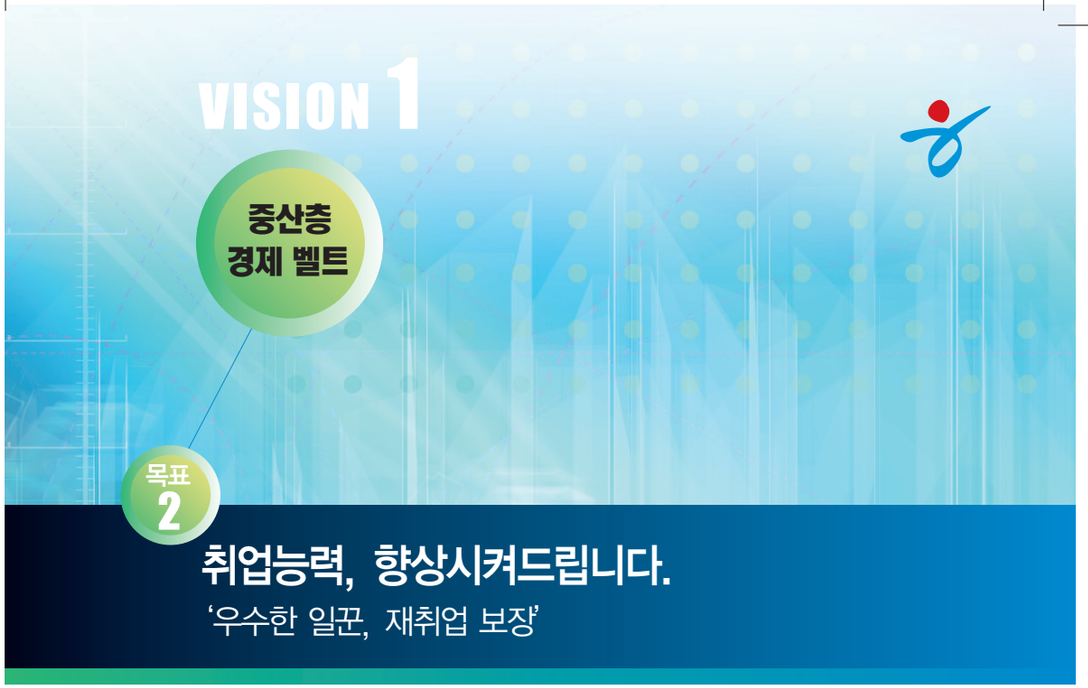
4대 보험료 등 부담금 조정(소규모 기업) / 인재육성시스템, 기업지원환경 구축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보험료 등의 부과는 영세기업들의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고용부담금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인력이동은 취업난을 부추기고 다시금 기업경영상 인력난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인재육성시스템을 강화하고, 잦은 인력이동이나 취업다양화에 대응하여 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인력수급 및 인재육성제도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시장이 자율화 ·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이동의 증대와 취업의 다양화에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재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 **영세상공인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4대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고용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기업의 다변화 전략이나 사업영역 확대 · 재편 및 변경에 따른 지원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및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과 세제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강화시키는 등 취업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제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지원 / 고용보험 가입확대 지원

영세업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비정규직 ·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합니다.

■ 소규모 영세사업체 근로자·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안전망 내에 포함시키고, 향후 관리를 통해 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생계여건상 또는 시간 부족으로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말에 직업훈련교육을 집중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실직자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구직수당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묶는 취업패키지 지원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 제정)

60세 이상 고용보장 지원 / 고령자 고용종합지원센터 확대 개편

평균수명 연장, 자녀교육비 증대 등으로 60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가져야 할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퇴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과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고령자 친화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채용을 늘리는 사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장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실직자와 조기퇴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중·고령자 전직지원장려금을 신설하며, 실직고령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개개인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장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을 '고령자고용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훈련·고용·복지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5 AM 페이지 54 western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실현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평생능력개발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내 근로자들의 평생학습개발교육 현실은 낮은 참여율, 낮은 직무관련성, 낮은 질적 수준 및 참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선진국 수준인 44%의 절반인 23%에 그치고 있으며, 숙련 노동력의 활용용이성(IMD)은 2006년 기준으로 47% 수준이고, 기업규모별 훈련참여율은 13.5%(300인 이하 사업장 기준)에 불과합니다. 고용형태별 훈련참여율도 상용직 41.6%, 임시직 15.8%, 일용직 3.8% 수준입니다.

■ 구직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평생직업과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11년 이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 근로자가 근로생활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개발지원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인 능력개발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해 실업자·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도적으로 능력개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현 행	개 편
공급기관 직접 지원	수요자가 공급기관 선택
공급기관의 분절·파편화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훈련기관·대학·평생교육시설 등 기능 융합
공급기관에 물량 배정 위주	학습자 친화적인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한도를 설정한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하고, 실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능력개발계획 수립 후 수요자가 공급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주고, 실업급여 수급권과 훈련의무의 연계 등을 통해 훈련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직업능력개발 이력관리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인증도 실시하겠습니다.

■ 직업 능력개발 및 훈련시장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을 폭넓게 개설 및 운영하여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사전에 진입장벽없는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기관은 모두 참여시키겠습니다. 훈련 과정 및 기관에 대한 심사·평가도 강화, 정보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6 AM 페이지 56 western

노인 · 여성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경제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고용지원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경로로써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전달체계 개편,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고용서비스 선진화, 민간부문 유관기관 연계, 고용지원센터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민간 이관(위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육성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직자 · 구인기업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일자리와 구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망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종합인력서비스산업 육성, 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규제 완화 및 워크넷 기능 강화('08년) → 유관기관 정보연계('09년) → 고용 · 인적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10~'11년)을 만들겠습니다.

■ 사회서비스부문에서 노인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등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리적 적응교육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춤형 여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사회적응능력과 직업능력이 취약한 노인,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과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찾아주기' 제도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고용지원센터를 지역주민이 훈련 · 고용 · 학습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및 집행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지원 확대

주된 일자리에서는 60세 이상까지 고용보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퇴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 · 취업 ·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주된 일자리에서의 60세 이상 고용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정년연장 · 계속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 정년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 실직 중 · 고령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85개)의 고령자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워크넷과 지자체 · 민간단체의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구축하겠습니다.

■ 고령자 친화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및 고령자 우선고용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의 우선고용이행의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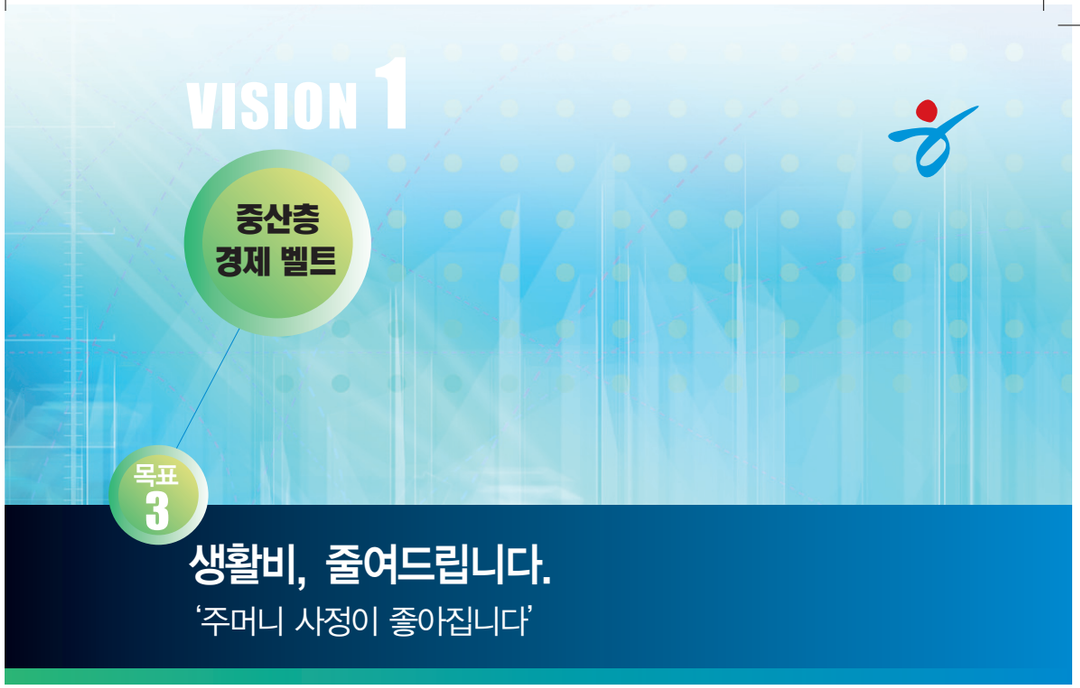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및 고용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률('05년) 비교 : 장애인-43.8%, 전국민-63.7%]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직업적 능력에 따른 특성화된 고용 및 능력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기반 비정부기구(NGO)와 장애인공단간 취업알선 관련 사업 및 고용정보망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밀착형 장애인일자리공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른 특성화된 고용 및 능력개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자치단체나 폴리텍 대학 등의 장애인고용촉진네트워크 참여를 유도('08년~)하고 자치단체,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기업체 등의 컨소시엄으로 장애유형별 독창적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09년)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서 모의적용을 통해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을 개발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의무고용제도 및 장려금제도를 개편하여 추진('08년~)하겠습니다.

■ 정부조달 물품 제조·구매 입찰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확대 및 우선구매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세금부담도 커졌습니다. 서민생활비를 30%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와 제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서민 6대 생활비 절감 / 서민 기본6대 생활비 절감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주요 생활비가 서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한 데 이어, 금년 5월부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고, 1000cc 이

하 경차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유류세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하겠습니다.

- 통신비(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규제개혁과 함께 통신사업자간에 합리적인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비를 20%이상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퇴근 고속도로통행료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원금이 회수되었거나 요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재조정하여 통행료를 50%까지 할인 또는 인하하겠습니다.

- 영어 공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많이 만들기 등을 통해 30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감축하겠습니다.

-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및 의료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이 세제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약값은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가격과 수량연동제 등을 통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물가 안정 / 서민가계경제 지원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인상과 식료품 등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곡물, 농업용원자재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인하 또는 무세화로 수입식품의 관세를 인하하여 음·식료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석유류, 농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비축원자재 방출 확대·에너지효율사업예산의 조기사업집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6 AM 페이지 64 western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 시행 /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약 153만 명)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기초생활자의 경우 이동전화 감면대상자수 약 79만 5천 명 중 실감면자수는 약 5만 9천 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요금감면효과 확대를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요건을 간소화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인에서 18세 미만 아동·63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복지 관점에서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한 기금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확대로 최대 360억 원(연간)의 통신요금 경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 악용방지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 근로자 생활비 절감

최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세원이 양성화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자영사업자 및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현행 8~35%인 소득세율을 세원투명성 제고와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제도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자영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중산·서민층의 실질소득이 개선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라 증가된 자영사업자의 세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6 AM 페이지 66 western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 실질소득 감소 방지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올라도 공제가 못 따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물가인상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중산층 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한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소득세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올라도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호를 위해 세부담이 물가를 반영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영·유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의 생활비 지출 중 가장 큰 고민은 자녀교육비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도 출산후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교육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교육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세제혜택으로 양육비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및 영세자영사업자 가정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신설 / 중산층 세부담 완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이 적은 다자녀가정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득이 적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일정소득 이하 중산·서민층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의 신설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입니다.



근로자 자녀 학자금부담 경감 / 학자금대출이자 소득공제 및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2007년 기준으로 교육물가 인상률은 5.7%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2%의 2.6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 등록금은 두 자릿수로 인상되어 연간 1천만 원을 상회하여 교육비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장학금의 11.5% 규모에 불과한 국가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장학기금 등을 설치하여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이자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겠습니다.

-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설립방안은 별도 기금 신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기능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관련 기관 예산과 장학예산 증액, 민간기부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 가계부담 경감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은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이자상승부담으로 실질생활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출을 받아 일정 규모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마련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세 계산시 소득을 공제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비 가운데 주택유지비용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가계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VISION 1

중산층 경제 벨트

목표 4

내집마련의 꿈, 앞당기겠습니다.

'집 걱정 덜어드립니다'

2002년 이후 각종 토지이용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여파로 향후 몇 년간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도 큽니다.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도 줄어들게 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금융비용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서민주택구입자금의 10%로 내집마련 지원 확대 / 내집마련 시기 단축

중산층과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강화로 서민의 내집마련 꿈은 이루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앞당기기 위해 주택신용보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택신용보증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가소유율 촉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주택구입 보증지원 가구 수도 연간 30만 호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하고 있지만, 주택보증 여력이 작아 2007년 기준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세대는 약 6만 5천 세대(세대당 약 3천만 원)로 활용도가 제한적입니다.
-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가칭)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여 서민이 주택가격의 10%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미국의 'Fannie Mae 97' : 자기자금 3%만으로 주택구입 가능

•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 90'(가칭) 상품 개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대출액은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여기에 주택신용보증(DTI 40% 조건은 유지)을 활용하여 추가 20% 대출 등 총 9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상품을 의미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또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6 AM 페이지 72 western

서민주택금융지원 확대로 이자부담 축소/ 가계부담 완화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한 중산층과 서민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집마련을 위해 이용한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 기존의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였던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장기보금자리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같은 대출의 대환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의 재원을 더욱 확충하고, 금리도 현재 수준(10년 6.75%, 20년 7%)을 유지하면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현재 변동금리('08년 3월 10일 현재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 3개월 최저 7.39%, 6개월 최저 7.32%, 12개월 최저 7.42%

매년 수도권 30만 호, 전국 50만 호 주택공급/ 주택공급물량 확대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증원인 중 하나는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과도한 지방은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 30만 호, 전국 50만 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1천 명당 285.3호인 주택 수를 2012년까지 320호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는 370호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 선진국 수준(일본 371호, 미국 429호, 영국 417호, 프랑스 470호)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경계조정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관리지역밀도확대 등 택지 및 주택 규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6 AM 페이지 74 western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보육·사회안전·교육·노인복지 시설 등 정부시범사업 최우선 배정) / 서민 삶의 질 향상

서민주택은 구 도심지 등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구 도심의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합니다만, 주택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민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서민주택 밀집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다양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시설 확충 등 서민의 자녀교육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를 통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 /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 수는 1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지방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급증의 원인은 고분양가에도 있지만, 집값 안정차원에서 수도권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정책적인 잘못도 큽니다. 지방에 적용하던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했지만, 아직도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가 많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가 필요합니다.

■ 지방소재 미분양아파트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경제력이 취약하고, 수도권에 비해 주택수요가 적은데도 고가의 아파트가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세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신규아파트 매수세도 미미합니다. 수도권과 달리 집값 안정이 이루어진 지방에 대해서는 투기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등록세 부담 완화 및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지방의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 한도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5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FQ)01한 나라 본 책(30~77) 2008.3.29 5:6 AM 페이지 76 western

를 위해서는 민간택지와 동일하게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도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 소재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별화가 필요한 규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규제를 유지하되, 지방의 경우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주택공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총 2만 5천 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시행 6개월 동안 불과 129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규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임대사업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광역시 및 지방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계획을 조정하고 분양가 인하 등 자발적인 노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공급 확대와 주택분양가 10% 추가 인하

우리나라의 도시용지는 전국의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심지 내에 집을 지을 택지도 부족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로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확대도 어렵습니다. 도시용지 부족과 택지 부족으로 땅값이 높을 수밖에 없고, 땅을 원재료로 하는 주택분양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안정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도시용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 전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늘리겠습니다.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장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는 현재 전국토의 6.2% 수준입니다. 도시외곽의 농지·산지를 활용하며, 관리지역 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2020년까지 도시용지를 전 국토의 9.2%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도시용지의 확대는 도시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주택분양가를 10% 더 낮추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를 15~25% 낮추고, 추가적으로 택지비를 20%가량 하향시킴으로써 전체 분양가가 10%정도 더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공공택지 산정원가기준의 개선, 용적률과 녹지율의 조정, 공공과 민간간의 경쟁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